

BOK 이슈노트



우리 경제 가계 양극화의 실태와 파급영향

| | | | |
|--|---|--|---------------------|
| 이재호 한국은행 조사국 조사총괄팀 차장 Tel. 02-759-4165 jaeho.lee@bok.or.kr | 김민정 한국은행 조사국 거시분석팀 조사역 Tel. 02-759-5233 kmj@bok.or.kr | 곽법준 한국은행 조사국 거시분석팀 팀장 Tel. 02-759-5261 totns@bok.or.kr | 2026년 6월 11일 |
|--|---|--|---------------------|

- 1** **우리 경제는 가계의 자산격차 심화와 소득격차 재확대가 맞물린 복합 양극화 상황에 직면해 있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가계의 자산 격차가 확대(순자산 지니계수 17년 0.584 → 25년 0.625)된 가운데, 부동산이 주로 고연령층에 집중되면서 자산의 세대간 양극화가 구조화되었다. 이에 따라 청년층 내에서는 소득 축적만으로 자산 형성 사다리에 오르지 못하는 계층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간 재분배 정책에 힘입어 하락 추세에 있던 소득 지니계수가 23년 0.323에서 24년 0.325로 소폭이나마 반등하는 등 소득 격차도 산업간 K자형 성장으로 다시 확대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나아가 시확산에 따른 노동 대체 가능성 등도 소득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 소득 격차 재확대는 기존의 자산 양극화를 더욱 공고히 하는 기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더한다. 이 같은 복합 양극화로 순자산·소득 모두 1분위인 가구 중 청년층_{20~30대} 비중이 20년 7.9%에서 25년 15.2%로 크게 증가하는 등 무주택·청년층의 경제 내 위상이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 2** **이러한 자산·소득 복합 양극화는 우선 경제 전반의 생산성과 소비활력을 저하시킨다.** 자산 불평등이 커질수록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낮아지는데, 국가패널 분석 결과 자산 상위 10% 보유비중이 1%p 상승하면 총요소생산성이 0.16%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령화로 인한 우리나라의 노노_{노老} 상속과 자산 잠김 현상_{wealth lock-in}은 이러한 비효율 문제를 더욱 심화시킨다. 또한 복합 양극화는 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청년 가계를 중심으로 경제활동 기반을 약화시켜 내수활력 저하의 요인이 된다. 이 같은 경제적 비용에 더해 양극화 심화는 노력을 통한 계층 이동 가능성을 제약함으로써 근로의욕과 사회적 신뢰를 약화시키는 등 사회적 비용을 구조적으로 늘리게 된다.
- 3** **복합 양극화에 따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소득 보전 중심 재분배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자산·소득 전반을 아우르는 새로운 정책 대응이 요구된다.** 우선 부동산에 집중된 가계 자산을 생산적 부문으로 유도하여 자본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기술 발전에 따른 경제구조 변화에 맞추어 조세 기반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근로소득을 통한 자산 형성 경로가 약화되지 않도록 제도를 점검해 갈 필요가 있다. 아울러 신성장 산업 생태계를 강화함으로써 성장의 과실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는 성장 기반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 본 자료의 내용은 한국은행의 공식견해가 아니라 집필자 개인의 견해라는 점을 밝힙니다.
 따라서 본 자료의 내용을 보도하거나 인용할 경우에는 집필자명을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논고 작성에 많은 도움을 주신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조성훈 교수님, 이지호 부총재보님, 김민식 거시전망부장님, 거시분석팀 김민수 차장님, 추성윤 조사역님께 감사드립니다. 본문에 남아있는 오류는 저자의 책임임을 밝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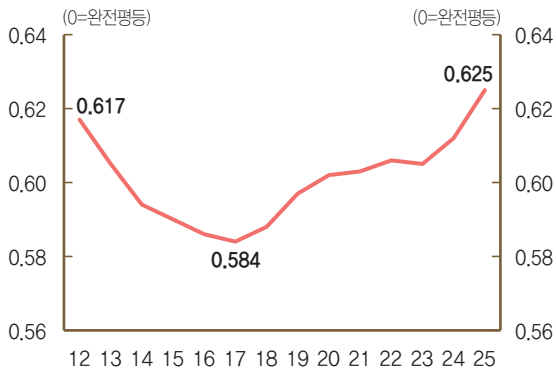


1. 논의 배경

1. 과거 우리 경제 양극화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에서 비롯된 가계소득 격차가 중심에 있었으나,¹⁾ 이제는 자산시장 성장과 기술변화가 만들어낸 복합적 문제로 그 양상이 변화하고 있다. 순자산 지니계수가 2017년까지 하락세를 보이다가²⁾ 이후 오름세로 전환하여 최근까지 지속 상승하는 등 자산 측면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IT 제조업 호조와 여타 부문의 성장 정체가 대비되는 K자형 성장 양상이 뚜렷해지며 산업 간 소득 격차도 확대되는 추세다. 혁신과 구조 전환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격차 확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최근과 같이 여러 차원의 양극화가 동시에 심화되는 상황은 우리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매우 크다.

순자산 지니계수가 빠르게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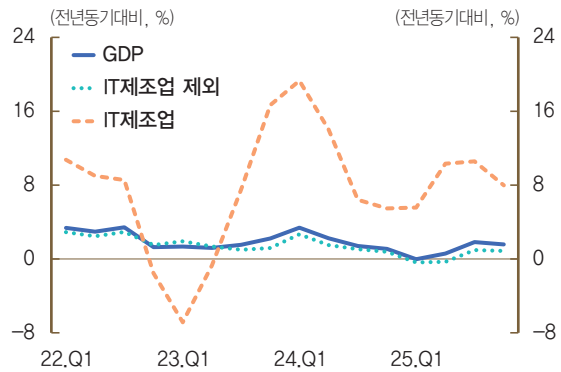
[그림 1] 순자산 지니계수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IT-비IT 성장을 격차 확대

[그림 2] IT-비IT 성장률



주: 1) IT제조업은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제조업'을 의미
 자료: 한국은행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최근 가계 양극화의 특징적 양상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II장에서는 최근 가계 양극화 실태를 자산과 소득 두 측면에서 점검하고, III장에서는 이러한 양극화의 경제적·사회적 영향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IV장에서는 종합평가와 함께 우리 경제 내 가계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대응 방향을 고려한다.

1) OECD(2016, 2019)는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격차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과거 우리나라 가계 소득격차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2) 본고에서는 지니계수 등 일부 장기 시계열 지표를 제외하고는 행정자료를 연계한 2017년 이후의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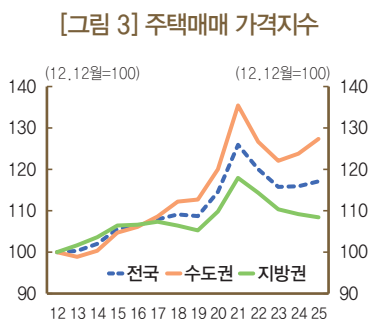
II. 최근 가계 양극화 실태

우선, 본 장에서는 최근 우리나라 가계 양극화의 실태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고착화된 자산 양극화와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로이 나타나고 있는 소득 양극화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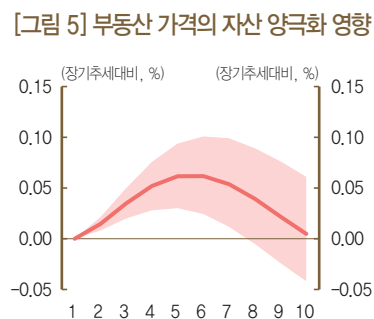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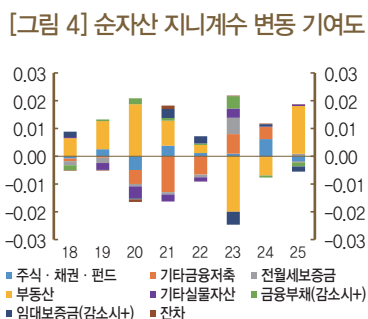
① 부동산 가격 상승이 자산 양극화를 고착화

2. 부동산 가격 상승이 우리나라 자산 양극화의 주요 원인이다. 2012년 이후 완만한 오름세를 보이던 주택매매가격은 팬데믹 기간 중 급등하였으며, 일시적인 조정을 거친 후 최근 다시 수도권권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순자산 지니계수 변동을 요인별로 나누어 보면, 이러한 부동산 가격의 변화가 자산 격차의 움직임을 설명하는 핵심기제로 나타난다. 베이지안 VAR 모형³⁾을 통한 실증분석 결과는 부동산 가격 상승 충격의 영향이 단기에 그치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자산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주택가격은 수도권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상승



부동산 가격 상승이 자산 불평등 심화의 핵심기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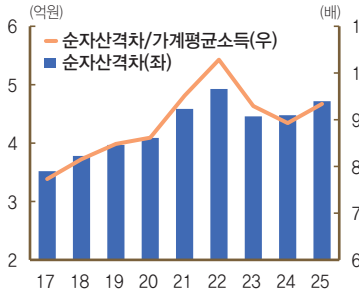


3. 이러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가계의 부동산보유별·지역별·세대별 자산 격차가 확대되었다. 부동산 보유 가구와 미보유 가구 간의 실질 순자산 격차가 부동산 가격 변화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며 확대된 가운데, 지역별 주택가격 편차로 지역 간 자산 격차도 심화되었다. 주목할 점은 생애주기상 주택 취득 시점의 차이로 인해 부동산을 주로 보유한 세대와 경제활동 초기에 있어 부동산을 보유하지 못한 세대 간 자산 불평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3) 자세한 추정 방법은 <참고 1> 「베이지안 VAR 모형 추정 방법」을 참조하기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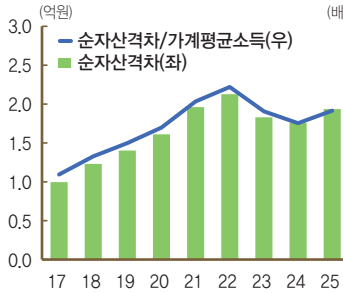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가계의 부동산보유별·지역별·세대별 자산 격차가 확대

[그림 6] 부동산 보유별 순자산 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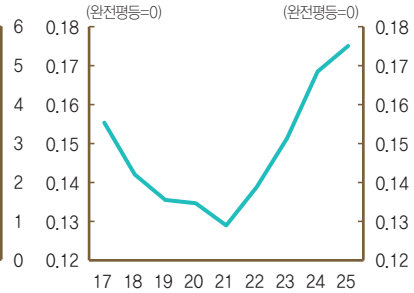
주: 1) 부동산 보유가구는 부동산 자산액이 0원 이상인 가구
2) 소비자물가지수로 실질화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저자계산

[그림 7] 지역간 순자산 격차



주: 1) 수도권-비수도권 격차
2) 소비자물가지수로 실질화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저자계산

[그림 8] 연령집단간 순자산 지니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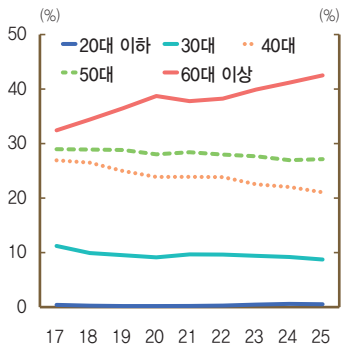


주: 1) 1세대위로 나눈 연령별 평균 순자산의 지니계수를 추정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저자계산

4. 주택 보유가 고령층에 집중된 데다 고령층 내에서의 자산 격차도 크다는 점은 이러한 자산 양극화를 구조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앞서 살펴본 대로 세대 간 자산 격차가 커진 상황에서 고령화까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고자산 계층 내 60대 이상의 비중이 빠르게 늘어나고 전체 순자산 중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증하는 '자산의 고령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와 동시에 고령층에서는 세대 내에서의 자산 불평등도 여타 연령층에 비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자산의 고령화와 고령층 내 자산 불평등은 상속과 증여 등 부의 대물림 과정을 거치며 자산 양극화를 고착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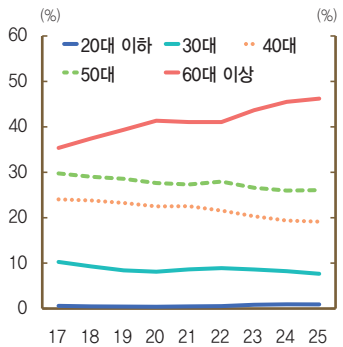
인구 고령화와 함께 자산 고령화가 심화

[그림 9] 순자산 4·5분위내 연령대별 비중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저자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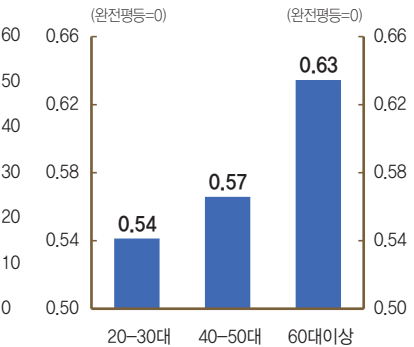
[그림 10] 우리나라 전체 순자산의 연령대별 보유비중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저자계산

고령층 내 자산 불평등 심화

[그림 11] 연령대 내 순자산 지니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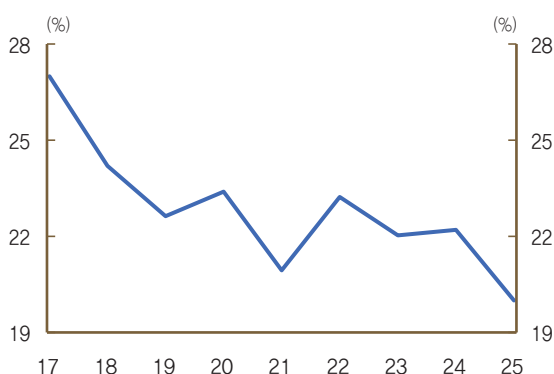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저자계산

5. 그 결과 청년층 내에서는 고소득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을 보유하지 못해 자산 형성 사다리에 오르지 못한 계층이 크게 증가하였다. 미국 등 해외에서 'HENRY_{High Earners, Not Rich Yet}'로 지칭되는 이들 계층의 확산은 국내에서도 청년층 내 '고자산·고소득' 비중의 뚜렷한 하락으로 확인되고 있다. 특히 자산 기반이 취약한 청년층의 경우 중상위 이상의 소득을 창출하더라도 자산 상위 계층으로 진입할 수 있는 이동성_{mobility}이 저하되는 등 자산 형성 사다리가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고소득 청년층도 자산 형성이 제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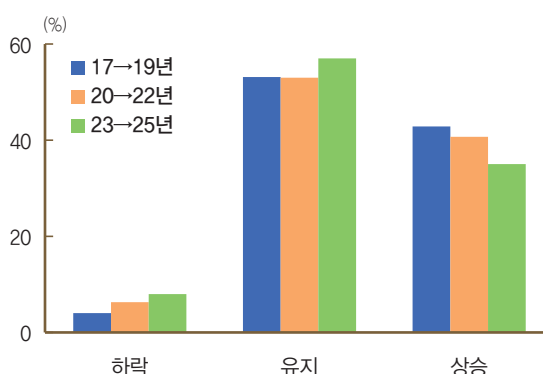
[그림 12] 청년층 내 고자산·고소득 비중



주: 1) 청년층은 20~34세를 의미
2) 고소득은 소득 4, 5분위, 고자산은 순자산 4, 5분위를 의미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저자계산

청년층의 상위 자산계층 이동 확률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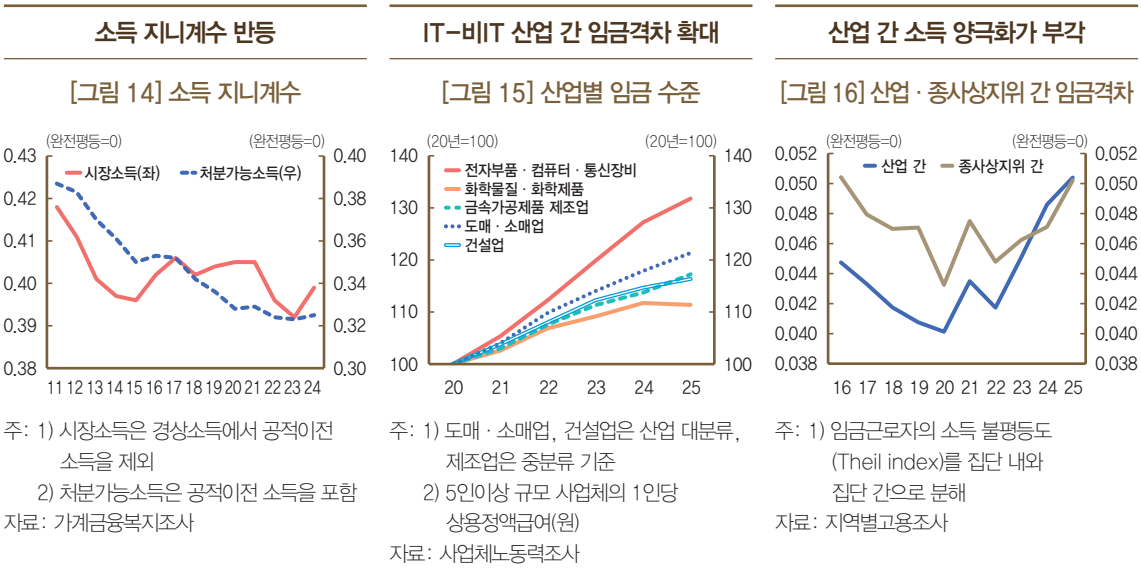
[그림 13] 저자산·중상위소득 청년층의 자산분위 이동 확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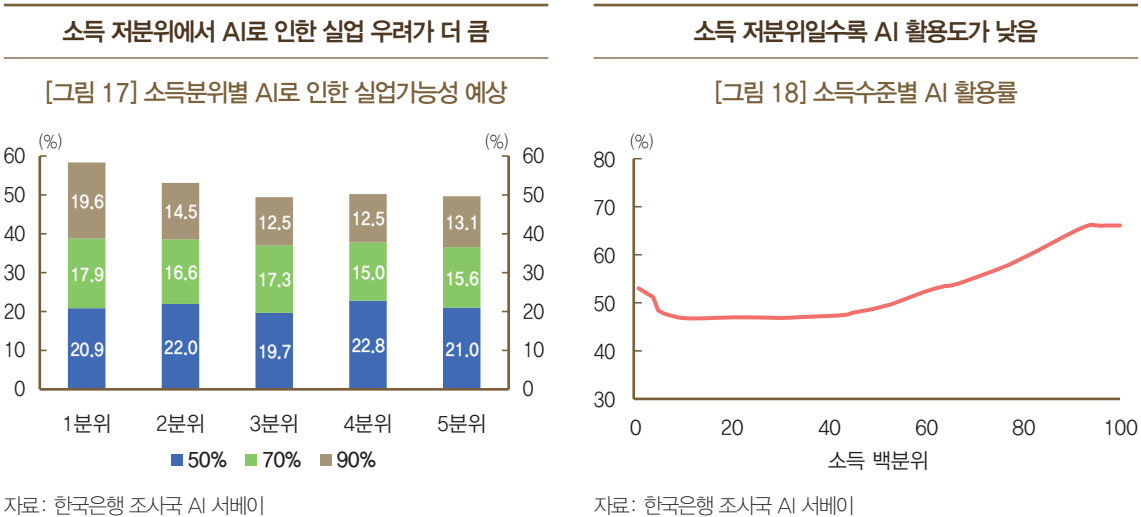
주: 1) 순자산 1, 2분위·소득 3, 4, 5분위 청년층(20~34세)의 순자산 분위 이동 확률: 하락(2→1), 유지(1→1, 2→2), 상승(1, 2→상위)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저자계산

② 기술 발전이 새로운 소득격차를 유발

6. 최근 급속한 AI 전환 과정에서 IT-비IT 산업 간 성장 차별화가 확대되면서 그간 정부의 재분배 정책에 힘입어 개선되어 온 소득 양극화가 재심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4년 소득 지니계수는 전년보다 소폭 상승하였으며, 정책 효과를 배제한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큰 폭으로 반등하였다. 최근의 소득격차 확대는 IT 부문에서 성과급 중심으로 임금이 큰 폭 상승한 반면, 여타 부문에서는 임금 상승이 제한된 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과거 정규직·비정규직 등 고용형태에 따라 주로 나타나던 임금격차가 산업 간에 부각되고 있는 점은 최근 소득 양극화의 특징적 양상이라 할 수 있다.



7. 이러한 상황에서 AI 기술의 확산은 로봇 기술^{Physical AI} 발전과 맞물려 저소득층과 경력 초기 단계^{Entry level} 청년층의 직무를 대체하고 있어 향후 소득 격차를 확대시키는 주요 요인⁴⁾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행 AI 서베이 결과⁵⁾에 따르면 소득 분위가 낮을수록 자신의 업무가 AI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의 경우 AI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기술 발전의 혜택도 소득 계층별로 불균등하게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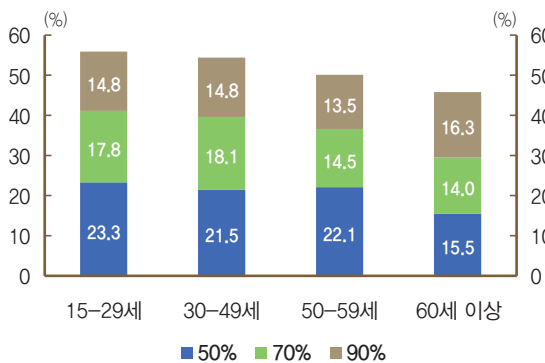
4) Cornelli et al.(2023)은 2010~2019년 86개국 국가패널을 이용한 분석에서 AI 관련 투자가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경향이 있음을 보였으며, Cazzaniga et al.(2024)은 AI가 고임금 근로자와 강한 보완관계를 형성할 경우 노동소득 불평등이 확대될 수 있고, AI 확산에 따른 자본이득 증가는 자산 불평등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Acemoglu(2025)는 AI가 자본소득과 노동소득 간 격차를 확대함으로써 전반적인 불평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을 지적하였다.

5) 서베이 방법 등과 관련해서는 서동현·오삼일·김민정(2025)을 참조하기 바란다.

연령대별로 보면 청년층이 AI로 인한 실업가능성을 타 연령대보다 높게 평가하였다. 실제 데이터에서도 최근 AI 노출도가 높은 업종일수록 청년 고용이 빠르게 감소한 반면 50대 고용은 오히려 증가하는 ‘연공편향적 기술변화_{seniority-biased technical change}’ 양상이 관측되고 있다.⁶⁾

청년층에서 AI로 인한 실업 우려가 더 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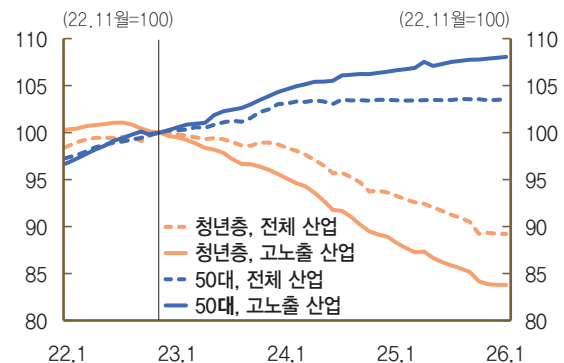
[그림 19] 연령대별 AI로 인한 실업가능성 예상



자료: 한국은행 조사국 AI 서베이

생성형 AI 출시 이후 청년층 고용의 감소세 지속

[그림 20] AI 노출도 상위 산업의 연령대별 취업자수 추이



주: 1) 실선 표시된 22.11월은 ChatGPT 출시 시점
 자료: 국민연금공단, 지역별고용조사, Felten et al.(2021), 한진수·오삼일(2025), 저자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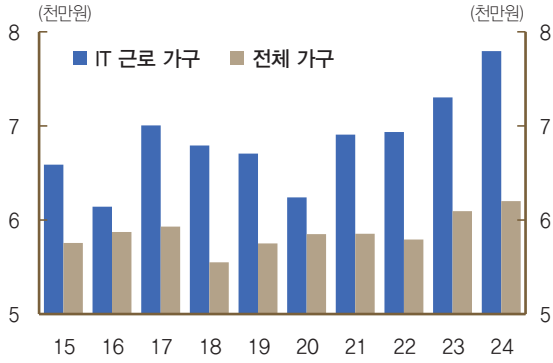
③ 소득 격차 확대는 자산 양극화를 더욱 공고화

8. AI 확산의 수혜가 일부 계층에 집중되면서 나타나는 소득 양극화는 기존의 자산 양극화를 더욱 공고화하는 기제로 작용한다. 고자산·AI 수혜 계층은 높은 소득을 바탕으로 자산축적을 가속화하는 반면, 저자산·AI 비수혜 계층은 높은 주거비 부담에 가계수입마저 불안정해지면서 자산 기반이 취약해지고 있다. 실제로 최근 데이터를 보면 IT 부문 종사 가구와 여타 부문 종사 가구 간의 소득 격차가 확대되는 동시에 자산 격차도 확대되고 있는데 이는 소득 격차가 자산 양극화에도 영향을 주고 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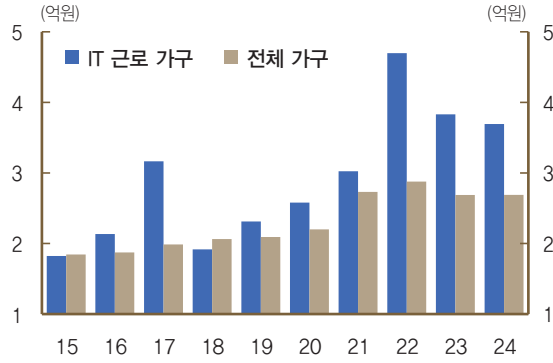
6) 한국은행과 국민연금공단 간 체결한 MOU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활용하였다. 2019.7월~2026.1월을 분석대상기간으로 한다. 2026.1월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수는 1,628만명이며, 이는 경제활동인구조사상 임금근로자의 74.8%, 상용근로자의 97.9%에 해당한다.

최근 IT산업 근로가구와 여타 가구 간 소득 및 자산 격차가 동시에 크게 확대

[그림 21] IT산업 근로가구 중위소득



[그림 22] IT산업 근로가구 중위순자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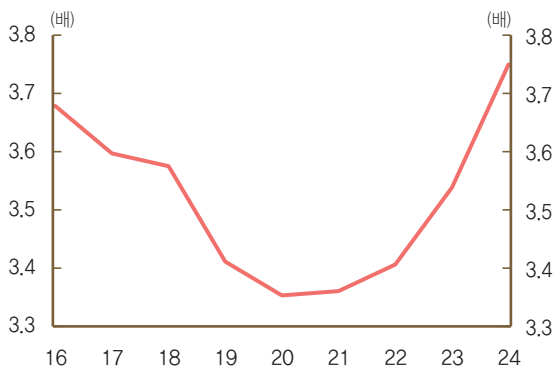


주: 1) 소비자물가지수로 실질화
 2) IT산업 근로가구의 경우 2010~2025년 중 설문을 응답한 시기 모두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 제조업에 근무하며, 근무 기간이 3년 이상인 가구를 의미
 3) 소득, 자산 및 부채 항목을 모두 응답한 가구를 대상으로 분석
 자료: 한국노동패널, 저자계산

가계 계층별로 볼 때에도 순자산 5분위와 1분위의 소득 배율이 2023년 이후 크게 확대되는 등 소득 증가가 고자산층에서 더욱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확인된다. 이는 기술혁신의 과실이 자본과 특정 숙련노동에 집중되고, 이렇게 심화된 소득 양극화는 자산 양극화를 다시 가속화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고자산층에서 소득이 더 빠르게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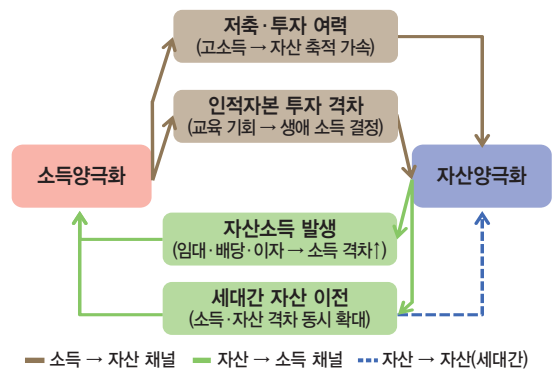
[그림 23] 순자산 5분위/1분위의 소득 배율



주: 1) 처분가능소득 기준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자산·소득 양극화는 각각의 양극화를 상호 강화

[그림 24] 자산·소득 양극화 상호 강화체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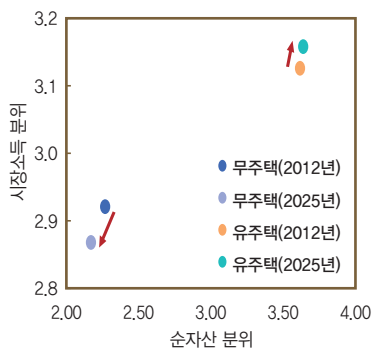
자료: 저자작성

④ 복합 양극화로 무주택·청년층 경제 내 위상 하락

9.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고착화된 자산 양극화 상황에서 AI 확산에 따른 소득 격차 확대에 직면하며 무주택·청년층은 경제 내 위상이 크게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2012년과 비교할 때 2025년 유주택 가계의 순자산·소득분위는 상승한 반면 청년층, 특히 경제활동 초기인 20~29세 무주택 청년세대는 순자산·소득분위가 모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순자산과 소득 모두 1분위인 가구들 중에서 20~30대 비중만 상승하고 있는 상황은 복합 양극화의 부정적 여파가 청년층에 전이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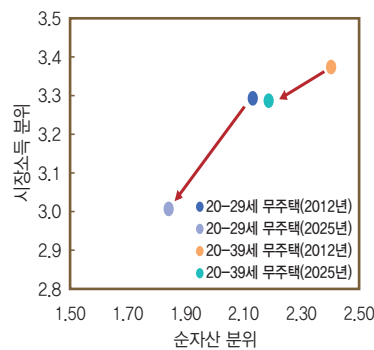
무주택자 및 무주택 청년층의 순자산·소득분위 하락

[그림 25] 주택보유별 순자산·소득분위 변화



주: 1) 유주택은 점유형태 '자가' 기준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저자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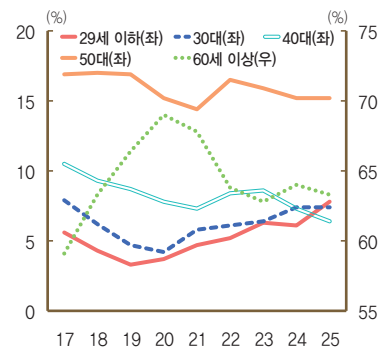
[그림 26] 청년층 무주택자 순자산·소득분위 변화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저자계산

순자산·소득 1분위 청년층 증가

[그림 27] 순자산·소득 1분위 내 연령대별 비중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저자계산

III. 가계 양극화의 파급 영향

이번 장에서는 가계 양극화의 거시경제적 비용을 생산성 하락, 내수활력 저하, 경기 취약성 확대 측면에서 분석하고, 이와 함께 노력과 보상에 대한 신뢰 약화 등 사회제도적 비용도 점검한다.

① 거시경제적 비용

10. [A. 생산성 하락] 자산 불평등이 확대될수록 경제주체들이 기술개발과 혁신 대신 자산가격 변동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이로 인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낮아져 국가 전체의 생산성이 저하된다.⁷⁾ 국가패널 데이터_{120개국}를 활용한 동태패널 분석 결과⁸⁾에 따르면 상위 10%의 자산점유율이 1%p 상승할 경우 2년 후 중요소생산성_{TFP}이 0.16%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위 10% 순자산 점유율이 2022년 43.0%에서 2025년 46.1%로 상승⁹⁾하였는데, 위 분석 결과를 감안할 때 이는 자산 격차 확대가 우리 경제의 성장과 생산성 향상에 작지 않은 제약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국가패널 분석 결과 자산 양극화는 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하락

[표 1] 국가패널 실증분석 결과

| 종속변수: 로그중요소생산성 | 추정 계수 | 표준오차 |
|------------------------------------|------------------|-----------------|
| 로그중요소생산성 _{t-1} | 0.9276*** | (0.0896) |
| 자산상위 10% 보유비중 _{t-1} | -0.00002 | (0.0008) |
| 자산상위 10% 보유비중_{t-2} | -0.0016** | (0.0008) |
| 관측치수(국가수) | 5,028(120) | |

주: 1) *** p<0.01, ** p<0.05, * p<0.1
 자료: 저자추정

11.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 중심의 자산 보유로 생산적인 부문에 자원이 활용되지 못한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고령화로 인한 자산 잠금현상_{wealth lock-in}은 이러한 자원 비효율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자본이 혁신기업이나 신기술 분야로 유입되기보다 비생산적 자산이나 고령층에 장기간 묶일 경우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신규 기업의 진입과 혁신 활동이 제약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보유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매우 높는데 고령층으로 갈수록 이 같은 경향이 강화된다. 고령 가계가 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거주 목적의 실물자산이라는 특성상 거래·이전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어서, 세대 간 자산 이전과 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향이 있다. 실제 여러 상속 관련 통계들도 고령 세대의 자산이 자식 세대로 이전되는 시기가 최근 들어 더욱 늦춰지고 있음_{老老 상속}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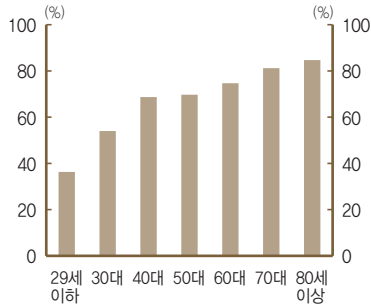
7) OECD(2024)도 불평등이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사회이동성 저하 등을 통해 생산성과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을 지적하였다.

8) 자세한 추정 방법은 <참고 2> 「자산 양극화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추정 방법」을 참조하기 바란다.

9) 동 점유율이 2017년 41.8%에서 2021년 43.3%로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최근 증가속도는 빠른 수준이다.

고령층의 높은 부동산 자산 보유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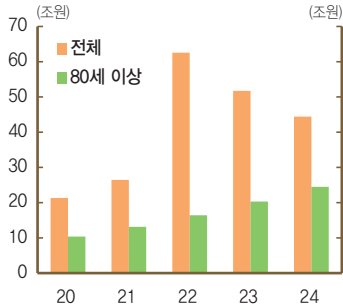
[그림 28] 연령대별 보유자산 중 부동산 비중



주: 1) 2025년 조사 기준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저자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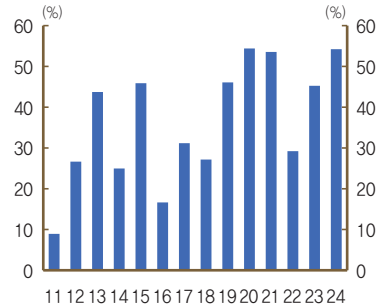
우리나라 노노_{老老} 상속 확대 추세

[그림 29] 80세 이상 상속재산가액



자료: 국세청, 언론보도

[그림 30] 고령층 상속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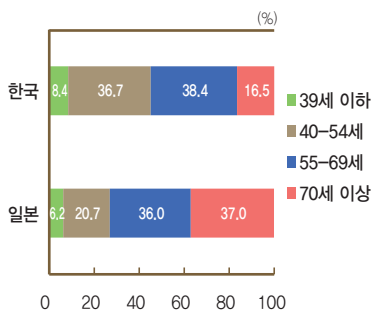


주: 1) 55세 이상이 상속수혜자인 경우
자료: 재정패널조사, 저자계산

12. 일본 사례¹⁰⁾에 비추어볼 때, 향후 국내 고령층의 자산 잠김 문제는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일본은 금융자산이 가계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이 중 약 70%를 55세 이상 연령층이 보유하고 있다. 연령별 평균 자산 분포를 보면 고령층의 자산 수준이 80세 이상에서도 크게 감소하지 않는 양상을 보인다. 한국의 급격한 고령화 속도를 감안할 때, 향후 국내 고령층의 자산 집중 현상이 일본 사례를 따라 한층 심화될 여지가 크다. 이러한 자산 잠김은 청년층의 초기 자산형성을 제약하여 인적자본 축적과 생산적 도전을 어렵게 만들고, 중장기적으로 생산성 저하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일본의 높은 고령층 자산집중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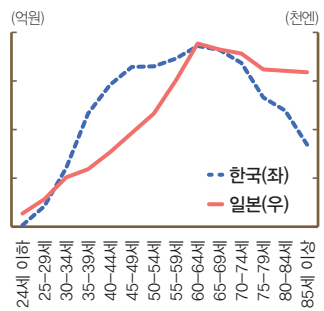
[그림 31] 전체 자산의 연령대별 보유 비중



주: 1) 2019년 일본 금융자산, 한국 부동산 자산 기준
자료: 2024년 일본 내각부 경제재정 보고, 가계금융복지조사, 저자계산

일본 초고령층 보유자산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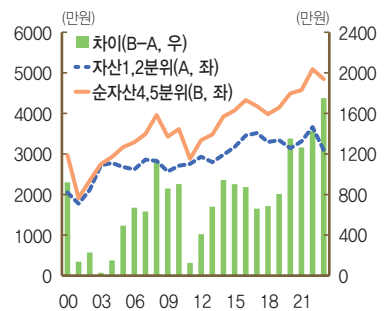
[그림 32] 연령대별 평균자산



주: 1) 2019년 일본 금융자산, 한국 부동산 자산 기준
자료: 2024년 일본 내각부 경제재정 보고, 가계금융복지조사, 저자계산

청년층 초기자산 수준이 생애 소득에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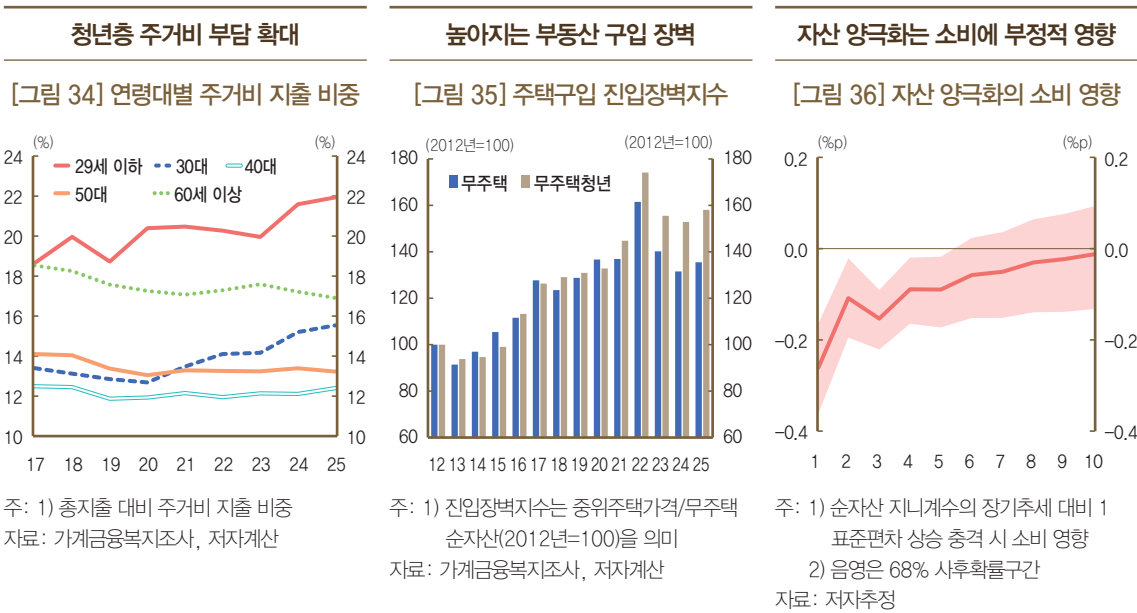
[그림 33] 초기 자산분위별 생애 소득



주: 1) 2000년 기준 20대 중 순자산 1, 2분위와 4, 5분위의 생애 소득 평균
자료: 한국노동패널, 저자계산

10) 자세한 내용은 <참고 3> 「일본의 노노상속 현황」을 참조하기 바란다.

13. [B.내수활력 저하]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자산격차 확대는 가계의 주거비용을 높이고, 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청년 가계의 경제활동 여력을 제약하여 경제 전체의 내수활력을 저하시킨다.¹¹⁾ 연령별 주거비 지출 비중을 보면 20~30대 청년층에서 임차료 등 주거비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무주택 가계의 경우 주거비 부담에 더해 주택구입 진입장벽이 높아짐에 따라 내 집 마련을 위한 필요저축 규모가 늘어나게 된다.¹²⁾ 이러한 주거비 상승과 저축 증가는 가계의 재량지출 여력을 줄이고 결국 경제 전반의 내수활력을 낮추는 요인이 되고 있다. 베이지안 VAR 모형을 활용한 분석¹³⁾에서도 자산 불평등은 가계 소비에 상당 기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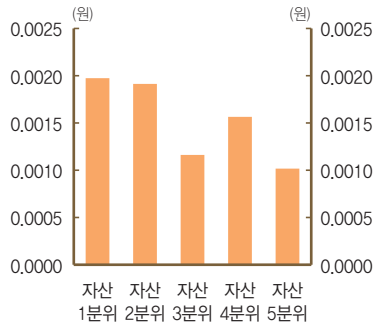


14. 아울러 고자산층은 다른 계층에 비해 자산 증가에 따른 소비 확대 효과^{wealth effect}가 작은 데다, 고령의 자산층은 소비에 활용할 현금 유동성이 제한적이어서 이들에게 자산이 집중됨에도 불구하고 소비는 제약된다. 고령층 내에서는 부동산 보유로 자산가치는 상승하였으나 소득이 적어 소비를 쉽게 늘리지 못하는 계층^{LIRO, Low Income asset-Rich Older}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11) Lee(2025) 등 기존 연구들은 자산 불평등이 계층 간 소비성향 차이로 인해 전체소비를 제약할 수 있음을 보였다.
12) 실제 1980~90년대 대만에서도 부동산구입을 위한 저축증가로 저축률이 크게 상승한 바 있다(Lin · Lai, 2003).
13) 자세한 내용은 <참고 1> 「베이지안 VAR 모형 추정 방법을 참조하기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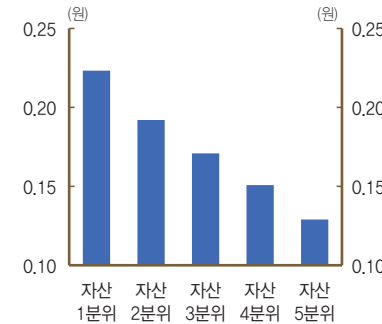
고자산층의 낮은 자산효과 및 한계소비성향¹⁴⁾

[그림 37] 자산분위별 자산효과



주: 1) 자산 1원 증가 시 소비 반응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저자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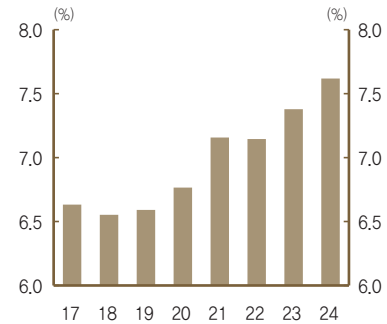
[그림 38] 자산분위별 한계소비성향



주: 1) 소득 1원 증가 시 소비 반응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저자추정

고령 고자산층의 낮은 현금 유동성

[그림 39] 고령층 내 고자산·저소득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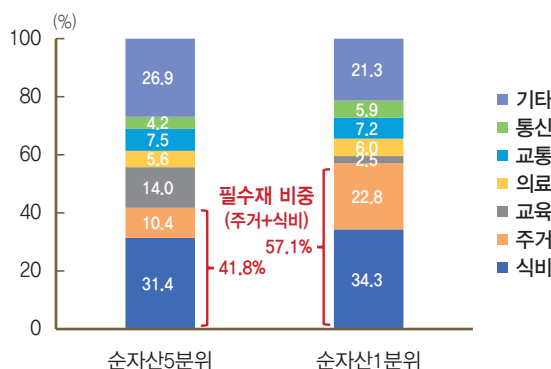


주: 1) 65세 이상 중 순자산 4~5분위·소득 1분위 비중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저자계산

15. [C.경제 취약성 확대] 자산·소득 복합 양극화는 고소득·고자산 가계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청년층의 재무여건을 악화시켜 경제적 충격에 대한 취약성을 확대시킨다. 고소득·고자산 가구에 대한 지나친 의존은 충격에 대한 가계 전반의 완충력을 악화시킨다. 특히 동 계층의 경우 변동성이 큰 재량재 지출 비중이 높아 충격 발생 시 경기 진폭을 확대시킬 수 있다. 아울러 청년층은 주거비 충당, 투자자금^{소위 "영끌"} 마련 등을 위해 그간 부채를 크게 늘렸는데, 이는 경제충격에 대응한 가계의 감내여력을 악화시켜 경제 취약성을 더욱 높일 것으로 판단된다.

고자산층의 높은 재량재 소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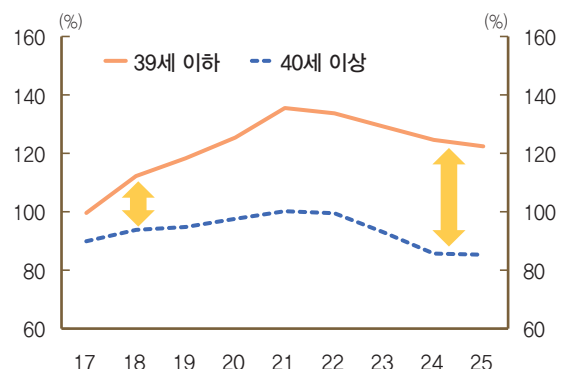
[그림 40] 고자산·저자산 가구 소비품목



주: 1) 2025년 조사 기준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저자계산

주거비 목적 등으로 청년층 부채비율 상승

[그림 41] 연령대별 소득대비 금융부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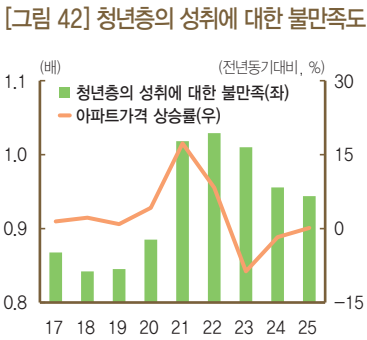
주: 1) 금융부채 비율은 금융부채 평균값/경상소득 평균값*100을 의미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저자계산

14) 자산효과 및 한계소비성향 추정방법은 한국은행 이슈노트 제2026-10호 「우리나라 주식 자산효과에 대한 평가의 <참고 1>」을 참조하기 바란다.

② 사회제도적 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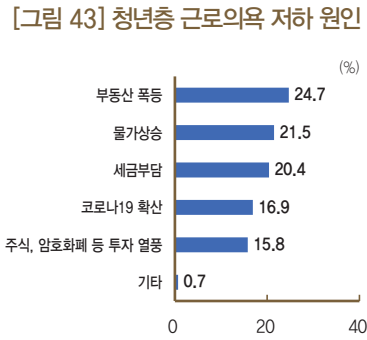
16. 자산·소득 양극화는 이러한 거시경제적 비용 외에도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데, 특히 고착화된 경제력 격차는 계층 이동 가능성에 대한 사회 전반의 기대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자산 양극화가 확대될 경우 근로만으로는 자산 격차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노력과 보상의 연결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사회적 신뢰가 약화되고 세대간 갈등이 양산된다. 또한 자산 보유가 어려운 청년층의 경우 주거비 부담으로 결혼과 출산이 제약될 가능성도 크다. 이는 양극화가 결혼과 출산, 그리고 사회적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다수의 실증분석 결과와도 일치한다.¹⁵⁾

청년층의 성취에 대한 불만족도 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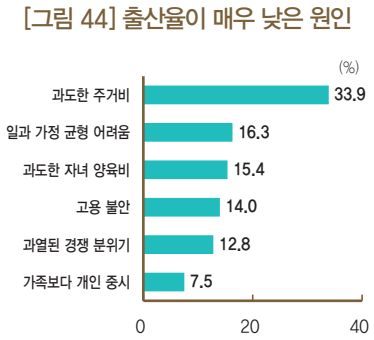
주: 1) 청년층의 성취에 대한 불만족도는 성취에 대한 청년층의 불만족 비중/60대 이상 불만족 비중을 의미
자료: 사회조사

부동산 가격 상승이 청년층 근로의욕 저하



주: 1) 2021년 8월 중 만18~29세 청년대상 설문조사 기준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과도한 주거비가 출산율 하락의 주요 원인



주: 1) 2023년 12월~2024년 1월 중 만19~34세 청년대상 설문조사 기준
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표 2] 가계 양극화 관련 계층별 경제적 특징과 영향

| | 고자산 | 저자산 |
|-----|--|--|
| 고소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전체의 의존도 증가 경기변동성 확대 | HENRY: High Earners Not Rich Yet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시장 진입비용 증가 부채 증가로 경제 취약성 확대 |
| 저소득 | LIRO: Low Income asset-Rich Old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동성 부족 소비활력 저하 | 무주택·청년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거비용 증가 근로의욕 하락 결혼·출산 제약 |

자료: 저자작성

15) 성원·정종우(2023)는 2002~21년 중 우리나라 출산율 하락이 도시 인구 집중과 실질 주택가격 상승의 영향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분석하였으며, 김시원(2025) 또한 도시 지역의 아파트 매매 및 전세 가격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낮아지는 상관관계를 실증하였다. 아울러 강성익·구자훈(2020)은 주택 불평등이 신뢰, 협력, 교류 등 사회적 자본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는 등 관련 선행 연구들은 자산 격차가 인구 구조 및 사회적 신뢰에 미치는 다각적인 부정적 효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IV. 종합평가 및 정책적 시사점

17. 우리 경제는 자산_{stock}과 소득_{flow} 측면 모두에서 가계 불평등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이 자산 격차를 확대시킨 가운데, AI 전환은 K자형 성장을 통해 산업부문간 소득격차를 유발하고 향후 노동 대체 등을 통한 양극화 심화 가능성도 높이고 있다. 이 같은 복합 양극화는 경제 전반의 생산성 저하와 소비 위축을 초래해 성장 잠재력을 잠식할 우려가 크다.
18.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사후적 재분배 정책은 지금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 누적된 자산 격차와 산업 간 구조화된 생산성 차이에 기인한 양극화 상황에서 일부 취약층에 대한 생계비·고용 지원만으로는 근원적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다. 이에 더해 기술 진보에 따른 노동 소득 분배율 하락은 전통적 조세 기반을 잠식하여 정책 시행을 위한 재정여력을 약화시킬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가계의 소득 형성 및 자산 축적 전반을 아우르고 지속적 정책 여력을 담보할 보다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① 자산 형성 지원 및 자본의 생산적 선순환 유도

19. 부동산 중심의 가계 자산구조를 개선하고 생산적 자산 형성 기회를 확대하여 경제 전반의 자본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부동산의 과도한 기대수익을 낮추어 가계 자금을 생산적 부문으로 유도하는 것이 효율적 자원배분을 위해 우선되어야 하겠다. 아울러 청년·무주택자에 대한 내 집 마련 정책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의 안정적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등 가계의 자산 형성 채널을 다양화하기 위한 정책들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② 기술혁신에 대응한 재분배 패러다임 전환

20. 기술 발전의 성과가 경제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재분배 체계를 재설계하고, 인적자본의 기술 적응력을 높이는 노력이 요구된다. 기술 발전에 따른 경제구조 변화에 맞추어 조세 기반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근로소득을 통한 자산 형성 경로가 약화되지 않도록 제도를 점검해 갈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기술 대체 위험이 큰 직군을 선제적으로 지정하여 근로자들의 원활한 이직과 전직을 위한 직업훈련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교육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통해 전 국민의 AI 활용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기술혁신 과정에서 소외되는 계층 없는 포용적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③ 신성장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생태계 선순환 강화

21. 전략 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국내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통해 경제 성장 동력을 다변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 비IT 산업이 직면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조선, 방산, 원전 등 핵심 산업에 과감하게 투자하여 국가 성장 엔진을 다각화하는 노력이 시급하다. 반도체 등 주력 산업의 경우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포함한 국내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활성화함으로써, 일부 선도 기업의 성장 성과가 산업 전반으로 파급되어 다수의 기업과 근로자가 혜택을 공유할 수 있는 선순환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겠다.

〈참고 1〉

베이지안 VAR 모형 추정 방법

자산 양극화가 민간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VAR모형을 추정하였다.

$$Y_t = C + \sum_{p=1}^2 \Phi_p Y_{t-p} + \Psi D_t + \epsilon_t, \quad \epsilon_t \sim N(0, \Sigma)$$

여기서 t 는 분기를 의미하며, Y 는 내생변수 벡터로 순자산 지니계수, 민간소비 증가율, 물가상승률, 국채금리(3년물), 주택매매가격지수(한국부동산원) 상승률을 포함한다. C 는 상수항, D 는 팬데믹 기간 더미이며, ϵ 는 오차항을 의미한다. 연간지표로만 공표되는 순자산 지니계수의 경우 이차식 보간법^{quadratic interpolation}을 통해 분기자료로 분해하였다. 구조충격은 상기 변수 순서에 따른 Cholesky분해로 식별하였다. 추정에는 Normal-Wishart Prior 기반의 베이지안 방법론을 이용하였으며, 데이터의 정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확산 사전분포^{diffuse prior}를 가정하였다. 사후분포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10,000번 반복하여 추출하였다. 분석기간은 2012.1/4분기~2025.4/4분기이다.

〈참고 2〉

자산 양극화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추정 방법

자산 양극화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Steenbrink and Skali(2026) 등을 참고하여 아래의 국가패널^{120개국} 중요소생산성 결정식을 추정하였다.

$$\log(TFP)_{i,t} = \alpha + \psi \log(TFP)_{i,t-1} + \sum_{k=1}^2 \beta_k Top10share_{i,t-k} + \gamma X_{i,t-1} + \mu_i + \tau_t + e_{i,t}$$

여기서 i 와 t 는 각각 국가와 연도, 종속변수인 TFP 는 중요소생산성을 의미한다. TFP 의 높은 지속성을 통제하기 위해 전기 종속변수를 포함하였다. 핵심 설명변수인 $Top10share$ 는 자산 상위 10%가 차지하는 자산 비중을 의미하며, 자산 불평등이 생산성에 미치는 시차를 감안하여 1~2년 시차변수로 포함하였다. X 는 인적자본, GDP대비 투자비중, 무역개방도, 인구 및 고용자 수를 포함하는 거시경제 통제변수 벡터이며, τ_t 와 μ_i 는 각각 시간 고정효과 및 국가 고정효과를 의미한다. 내생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Arellano and Bover(1995)와 Blundell and Bond(1998)의 2단계 시스템 GMM^{two-step system GMM} 추정법을 활용하였다. 불평등 지표는 World Inequality Database, 거시지표는 Penn World Table의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분석기간은 1980~2023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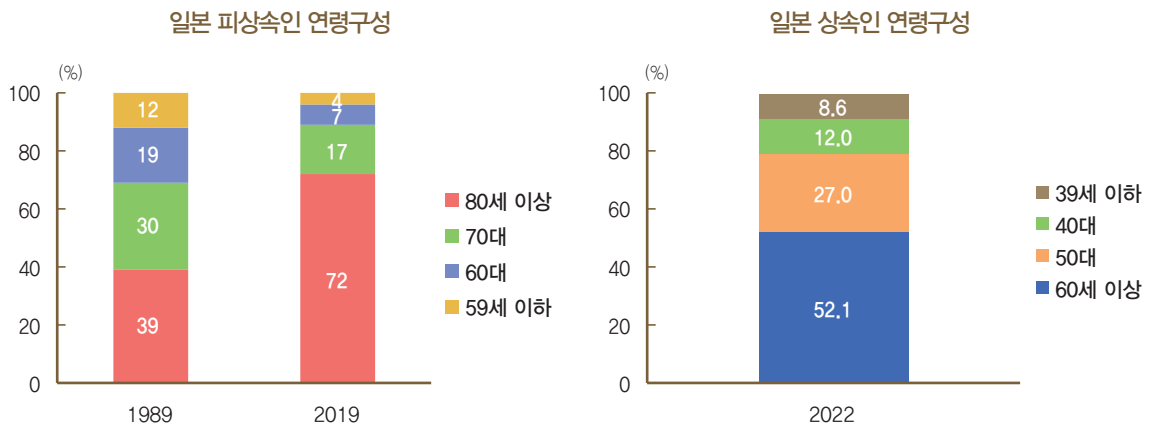
〈참고 3〉

일본의 老老상속 현황

인구 고령화를 먼저 경험한 일본은 고령의 부모가 고령의 자녀에게 자산을 상속하는 老老상속이 일반화 되면서, 고령 세대의 자산 잠김 문제가 만연한 상황이다. 고령화 진전에 따라 피상속인(재산을 남기는 사람)이 80세 이상인 비중이 1989년 약 40%에서 2019년에는 70%를 넘는 수준까지 크게 상승하였다. 아울러 상속인의 경우 2022년 약 80%가 50세 이상으로 나타났다.

2024년 일본 내각부 경제재정보고(경제재정보고)는 이 같은 老老상속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다양한 경제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우선 자산 보유액이 정점에 달한 고령층이 장수 리스크에 대비해 자산을 인출하지 않고 예금 위주로 보유하는 현상이 심화되면서, 경제 전반의 소비활력과 자금 순환 속도가 저하되고 있다. 이는 주택 취득 및 교육 투자 등 자금 수요가 절실한 청년·중장년층에게 부가 적기에 배분되지 못하는 세대 간 자산 미스매치를 초래하여 인적 자본 축적과 내수 진작을 방해한다. 나아가 가계 금융자산이 현금·예금에 편중됨으로써 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이 제한되어 기업 투자가 억제되고, 결과적으로 기업 가치 향상을 통한 배당·자본이득의 형태로 가계 소득과 자산이 증가하는 선순환이 작동하기 어려운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일본 경제 내 老老상속이 만연한 상황



자료: 2024년 일본 내각부 경제재정보고

자료: 2024년 일본 내각부 경제재정보고

〈참고문헌〉

강성익 · 구자훈. 2020. “지역 불평등과 사회적 자본의 분포특성 및 상관관계 분석 - 서울시 권역생
활권 및 자치구를 중심으로,” 서울도시연구, Vol. 21, No. 4, 223-238.

김민수 · 추성윤 · 광법준. 2026. “우리나라 주식 자산효과에 대한 평가,” BOK 이슈노트 제2026-10호.

김시원. 2025. “주택 가격 및 주거지 면적과 출산율의 관계: 우리나라 83개 도시 자료를 이용한 실증
분석,” 경제분석, Vol. 31, No. 4, 33-62.

서동현 · 오삼일 · 김민정. 2025. “AI의 빠른 확산과 생산성 효과: 가계조사를 바탕으로,” BOK 이슈
노트 제2025-22호.

성원 · 정종우. 2023. “OECD 국가별 패널 자료를 통한 우리나라 저출산 원인 및 정책 효과 분석,”
BOK 이슈노트 제2023-32호.

한진수 · 오삼일. 2025. “AI 확산과 청년고용 위축: 연공편향(seniority-biased) 기술변화를 중심으로,”
BOK 이슈노트 제2025-30호.

2024년 일본 내각부 경제재정보고(經濟財政報告)

Acemoglu, Daron. 2025. “The simple macroeconomics of AI,” *Economic Policy*, Vol. 40, Issue
121, 3-58.

Arellano, M., and O. Bover. 1995. “Another look at the instrumental variable estimation of error-
components models,” *Journal of Econometrics*, Vol. 68, 29-51.

Blundell, R., and S. Bond. 1998. “Initial conditions and moment restrictions in dynamic panel data
models,” *Journal of Econometrics*, Vol. 87, 115-143.

Cazzaniga, Mauro, Florence Jaumotte, Longji Li, Giovanni Melina, Augustus J. Panton, Carlo
Pizzinelli, Emma J. Rockall, and Marina Mendes Tavares. 2024. “Gen-AI: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Future of Work,” *IMF Staff Discussion Notes No. 2024/001*.

Cornelli, Giulio, Jon Frost, and Saurabh Mishra. 2023. “Artificial intelligence, services
globalisation and income inequality,” *BIS Working Papers*, No. 1135.

Felten, E., M. Raj, and R. Seamans. 2021. “Occupational, Industry, and Geographic Exposure to
Artificial Intelligence: A Novel Dataset and Its Potential Uses,”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42(12), 2195-2217.

Lee, Byoungchan. 2025. "Wealth Inequality, Aggregate Consumption, and Macroeconomic Trends under Incomplete Markets," *American Economic Journal: Macroeconomics*, 17(1), 414–442.

Lin, Chu-Chia, and Yi-Fang Lai. 2003. "Housing Prices, Mortgage Payments and Savings Behavior in Taiwan: A Time Series Analysis," *Asian Economic Journal*, 17(4), 407–425.

OECD. 2016. "Labour Market Reforms in Korea to Promote Inclusive Growth," *OECD Working Papers*, No. 1325.

_____. 2019. "Rejuvenating Korea: Policies for a Changing Society," *OECD Report*.

_____. 2024. "Policy Approaches to Reduce Inequalities While Boosting Productivity Growth," *OECD Working Papers*, No. 1819.

Steenbrink, Rachel, and Ahmed Skali. 2026. "Wealth inequality and economic growth: Evidence from the World Inequality Database," *World Development*, Vol. 199, 107250.

Copyright © BANK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 본 자료의 내용을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BOK 이슈노트 No. 2026-14에서 인용"하였다고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 내용에 대하여 질문 또는 의견이 있는 분은 커뮤니케이션국 커뮤니케이션기획팀(02-759-4759)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한국은행 홈페이지(<http://www.bok.or.kr>)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